

민주노동당 쇄신과 발전을 모색하는 기획토론회

# 민주노동당 8년,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 2004년 원내진출 이후를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2월 18일(월)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동당사 4층 대회의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기획토론회 순서

토론 주제 : 민주노동당 창당 8년,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 2004년 원내진출 이후를 중심으로 -

### 1. 발제(25분)

<발제 > “민주노동당 8년, 성과와 한계”

- 최 규 엽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장)

### 2. 지정토론 (10분)

- 이 정 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치위원장)

- 이 영 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 이 병 렬(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

- 전 권 희(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랑구위원장)

### 6. 자유토론

### 7. 종료 및 뒷풀이

# 목 차

## <발제>

1. “민주노동당 17대 의정활동 평가와 대안 ..... 4  
- 최 규 엽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장

## <토론>

1. 민주노동당 창당 8년, 성과와 한계  
- 이 정 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치위원장)
2. 민주노동당 창당 8년, 성과와 한계  
- 이 영 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3. 민주노동당 창당 8년, 성과와 한계  
- 이 병 렬(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
4. 민주노동당 창당 8년, 성과와 한계  
- 전 권 희(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랑구위원장)

- <첨부자료 > 민주노동당이 걸어 온 길 ..... 13  
2007년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 ..... 20

# 민주노동당 17대 의정활동 평가와 대안

- 거대한 소수인가! 외로운 소수인가!

- 최규엽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장

## 1. 들어가며

2004년 13%의 지지로 8명의 비례의원과 2명이 지역구원으로 한국정치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따른 내외의 기대, 민중들의 박수속에 2004년 5월 31일 첫 원내 등원을 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2004년 첫해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보국감이 있었으며 쌀개방반대, 비정규직법안저지, x파일 투쟁에 이어 올초에 한-미 FTA반대 노숙농성에 이르기까지 9명의 의원은 숨가쁘게 달려왔다.

또한 소득세법, 최저임금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 전염병 예방법,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급식법, 주민소환제, 파산관련 법안등 제도적 흐름을 바꾸거나 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모범의원’ ‘성실의원’ 이것이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붙은 자랑스러운 칭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내진출 3년의 의정활동이 가져다주는 숙제 또한 적지 않다.

“의원들의 개별플레이가 심하다” “기층민중의 요구와 투쟁에 화답하지 않는다” “법안발의나 언론노출에만 신경쓴다” 는 등의 쓴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2004년 원내진출 초기에 가졌던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가 지금의 자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제대로 길을 온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본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 2004년 원내진출이후 최장집교수는 ‘이론과실천’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의 현재의 역할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법률화하지 못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10석 밖에 안되고, 250석 이상을 보수정당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류의 정당’이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그것은 헤게모니가 아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다른종류의 정당’을 우리는 원내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거니와, 진보적 의정활동의 상을 명확히 가지고 17대의정활동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진보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모색은 멈출 수 없으며 반드시 세워나가야 할 민주노동당의 과제이다.

올해 대통령선거와 2008년 총선이후 민주노동당은 제 2기의 원내활동을 전개하게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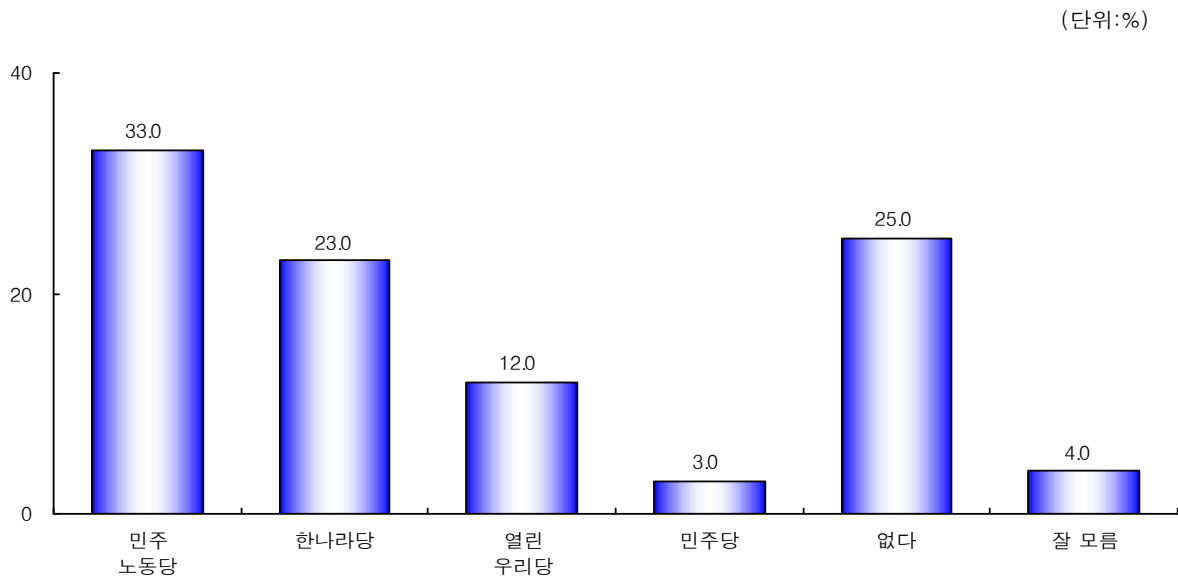
17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바로 진보적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이어야 한다.

## 2. 평가와 대안

### 1) 의정활동은 잘했으나 당은 위기이다?

우선 민주노동당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전문가

[질문] 지난 2년간 의정활동 최우수 정당



[ 17대의정활동 전문가 여론조사 - 한길리서치. 2006.8. 2 ]

또한 그 평가기준과 관련해서는

■ 의정활동 우수 평가 정당별로 본 최우수 정당 평가 기준

	합계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해서	정부 견제, 감시를 잘해서	사회적 약자의 이해 대변을 잘해서	입법 활동을 잘해서	도덕성이 높아서	잘 모름
	%	사례수	%	%	%	%	%	%
전체	100.0	71	31.0	29.6	29.6	5.6	2.8	1.4
의정활동 우수 정당별	열린우리당	12	33.3	8.3	33.3	16.7	8.3	.0
	한나라당	23	21.7	69.6	.0	4.3	.0	4.3
	민주당	3	33.3	33.3	33.3	.0	.0	.0
	민주노동당	33	36.4	9.1	48.5	3.0	3.0	.0

사회약자의 이해대변과 의정활동의 성실성측면에서 여타정당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았다. 즉, 노동자, 농민, 장애인, 빈민 등 서민을 위한 입법활동 등에 대해 나름대로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이다.

여타 정당과 비교하여 나름의 차별성과 성실성 측면에서 전문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① 거대한 소수전략의 이해

민주노동당 의정활동의 출발이 10명이라는 소수의 조건하에 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과 대중운동과 원내활동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거대한 소수전략’이 제출되었다.

이는 듣기좋은 레토릭도 아니고 무슨 주관적 소망의 문제가 아닌 소수정당의 생존전략으로 의정활동의 기본모토로 제시되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강조점은 다를 수 있으나, 진보정당의 원내활동은 강력한 대중운동과 결합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원내에서의 진보적 의제형성, 입법활동을 결합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역으로 원내활동을 바탕으로 대중운동을 촉발하고 대중운동의 견인차라는 상호 변증법적 관계를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수의원정당이 보수독점의 국회에서 입법기관, 정부견제기능으로서만의 의정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대중운동과의 연관성하에서 입법, 정책이슈화, 정치쟁점화 등의 폭넓은 원내정치활동을 설정한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정당으로서의 성격적 측면과 긴밀히 연동되어있다.

이른바, 사회운동정당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정당론이다.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정치세력화는 국가권력에의 접근뿐 아니라 사회적 동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원내화된 보수정당들과는 다른 사회운동정당이다. 따라서 정당의 목표에 있어 원내 의석을 극대화하는 데에 한정되는 보수정당들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의 목표는 시민의식의 진보화를 통한 사회 진보에 있으며, 정당의 기능도 보수정당들과는 달리 의회 내 정책의 법제화에 한정되지 않고 당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스스로 운동조직으로서 사회운동 세력들과 함께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2004. 조돈문)

따라서 거대한 소수전략은 양적측면에서의 전략문제라는 측면보다는 내용상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이 어떠한 기초하에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의 문제이다.

‘거대한’전략의 이 ‘거대’함이란 바로,집권전략하에서 원외 의 민중의 힘을 이끌어내고 민중운동과 결합하는즉, 법제화에 한정된 의정활동이 아니라 사회운동과 결합, 대중조직의 강화, 당원과 시민의 참여독려에 역점을 두는 전략이다.

이러한 점에서 2004년 하반기 당사업기조(①당의 대중정당화와 당과 의회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수권정당의 기반구축 ②민중운동 및 진보진영과의 연대전선 강화를 통한 원내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 ③제3당으로서의 정책정당 위상 강화)도 이에 준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거대한 소수전략에서 왜 소수만 남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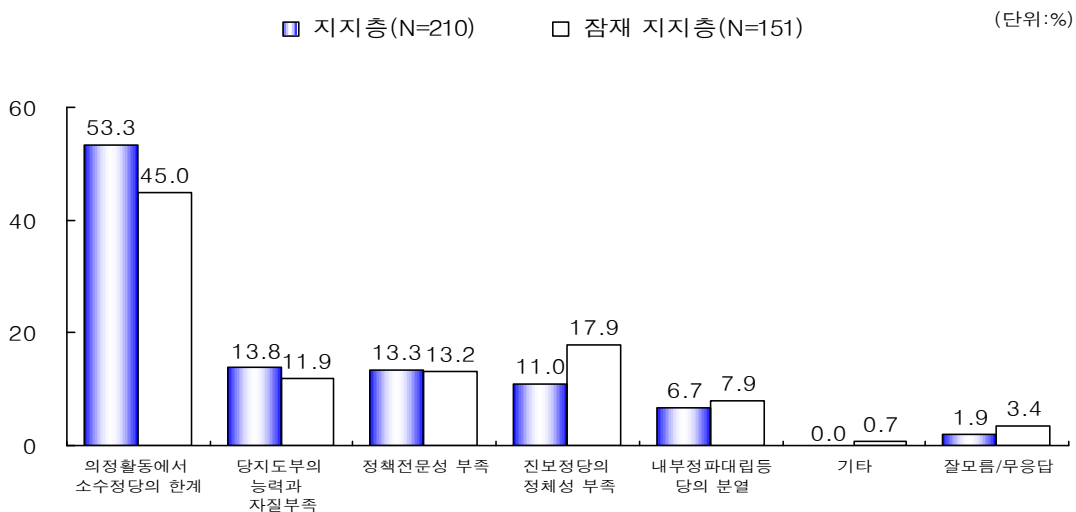
의정활동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의원단에서는 이런애기가 흘러나온다.

‘의원이 무슨 슈퍼맨인가??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가 있는데 이를 인정한 가운데 전술을 제기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소수의원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던 한 의원의 고심찬 애기였다.

소수정당의 한계! 이는 민주노동당이 위기진단과 관련 1위를 차지한 대목이다.

[그림2]민주노동당 위기 원인



그러나 의정활동에서 소수정당의 한계를 그야말로 ‘한계’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거대한 소수전략은 실종하게 된다.

소수의원정당의 객관적 제한성을 인정한데 기초해 제출된 것이 거대한 소수전략이기 때문이다.

2순위로 지적되는 당지도부의 능력과 자질부족, 진보정당의 정체성 부족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제출이 중요하다.

그러나 설문방향에 갇히는 벽을 넘어서 시각을 바꿔보면, 사회운동적 정당으로서 사회운동과 결합하는 의정활동의 문제로 시각을 변화시켜 봐야 한다.

투쟁의 결합측면에서, 집권전략위원회의 의정활동 관계자 인터뷰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2005년

농민의 쌀개방 반대투쟁과 원내투쟁의 결합의 모범사례를 꼽고 있다.

상임위활동, 본회 투쟁, 당과 전농 및 사회단체의 투쟁이 종합적으로 전개됐다. 특히 쌀개방반대관련해서 정부의 이면합의가 폭로되면서 대중적 분노가 기폭제로 작용했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굵직한 사안으로는 비정규직 입법화 저지, 노사관계로드맵 관련한 투쟁을 전개했고, 평택기지확장 저지 투쟁과 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문제, 환경오염문제, 한-미 FTA 저지투쟁등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원외에서 힘있게 벌이지는 대중운동이 있다면 대략적으로 그에 비례하여 원내투쟁이 힘있게 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우선 지적할 것은 대중운동을 원내로 결합시켜나가는데 수동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과연 지난 3년간의 원내전략에 대한 기초를 설정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거대한소수, 몸값올리기, 연단론 즉 일단 마이크를 잡아야 된다는 기준이 결과적으로 17대 국회 핵심적인 원내 전략이 되지 않았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또한 핵심 과제를 구분하지 못했다. 원내 활동의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반드시 관찰할 목표, 무력화할 대상,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항을 구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적이 있다.“ (집권전략위 의정활동관련 인터뷰중)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원내전략을 수립하는 관점을 보다 전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우선 민주노동당의 원내활동은 사회운동적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 전체를 성장시키고 집권을 향한 대중조직의 강화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차원의 입법활동이나 정부의 감시, 견제기능사업을 중심으로 돌때 당연히 부딪치는벽은 바로 ‘소수정당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대중운동을 우위에 둔다는것은 원외중심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기본지지계급인 노동자, 농민이며 영세상인, 학생등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조직하는 운동을 원내전략의 제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청년학생 실업문제, 농민과 농업의 파산등에 대해 문제화될 때 수동적 대응이 아닌 의원단차원의 전략수립과 대중운동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일치하에서 전략이 수립되어야 이른바, 사회단체와의 입버발동에 제한된 사안별 네트워크가 아닌 일상적 지속적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수립은 물론 의원개인의 역량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한 원내전략수립, 당 지도부와 의원단 차원의 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 ② 의원단과 당 지도부의 결합

거대한 소수전략을 실현여부를 둘러싸고 의원단과 당 지도부와와의 관계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논의안건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지난 2년 동안 최고위원회와 의원단 회의에서 같은 시기 공통으로 다뤄진 안건은 총 33건으로 월평균

공통 안건은 1.4건. 이 중 가장 많이 다룬 안건은 ‘비정규법안 대응’으로 총 6회(18.2%). 다음으로 ‘재보선 및 지방선거 대책’이 3회(9.1%), ‘임시회 및 국정감사 대응’, ‘공무원노조 탄압 대응’, ‘권영길 의원 지역사무실 경찰난입 대응’, ‘삼성불법 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쌀협상비준안 대응’ 등이 2회(6.1%).

<표21> 최고위원회-의원단총회 공통 안건 (2004.6. ~ 2006.5.)

일시		안건	일시		안건
최고위	의총		최고위	의총	
040614	040709	국회개혁특위 사업	050808	050809	삼성불법 정치자금 및 안기부도청
040712	040616	탈핵실천단 활동	050926	051003	국정감사 대응
040719	040720	이라크파병철회 투쟁	051004	051012	10.26 재보선 대응
040818	040817	과거사청산관련 대응	051011	051028	쌀협상 비준안 대응
040901	040907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선임 건	051031	051101	쌀협상 비준안 대응
040922	041001	후원금 모집 계획	051107	051101	최고위 사퇴 및 비대위 구성
041113	041109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	051109	051108	당 비대위 활동
041118	041119	공무원노조 탄압 대응 관련	051114	051111	학교급식법 수정 건
041129	041126	권영길의원 사무실 경찰난입 대응	051202	051206	비정규 및 농민투쟁 대응
041202	041203	권영길의원 사무실 경찰난입 대응	051208	051216	황우석 관련
050124	050131	설연휴 기획사업	060206	060207	비정규 법안 대응
050203	050131	2월 임시국회 대응	060207	060125	공직선거법 재개정
050407	050412	4.30 재보선 대책	060305	060302	당 3월 투쟁
050414	050422	비정규 법안 대응	060305	060302	지방선거대책위 구성
050613	050617	비정규 법안 대응	060330	060407	비정규 법안 대응
050621	050726	당직제도 개선 관련	060421	060421	비정규 법안 대응
050725	050802	삼성불법 정치자금 및 안기부도청			

개별 현안에 대한 안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과 관련한 당대회와 중앙위의 방침의 기초 하에 매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방침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그러나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고위에서 임시회와 국감 대응 등 종합적 전략을 논의하는 안건은 단 2건에 불과. 2005년 7차 최고위(0203)와 61차(0926) 회의 원내전략 관련 안건은 의정지원단이 작성.제출해 원안 통과.

(2006.12. 진보적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진보정치연구소)

논의안건 측면에서 의원단과 당지도부의 연관성이 극히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당 최고위원회는 의원단의 개별플레이등을 비판하고 의원단은 당의 전략적 선택과 주요한 정치방침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즉, 당과 의원단의 결합, 당에 의한 의원단에 대한 지도문제는 거대한 소수전략의 실현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우선 구조상의 문제로 살펴보면 ‘당직공직 겸직금지’의 문제이다.

당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원내정당화의 견재등으로 당 공직겸직을 금지해 왔다

2007년 2차 중앙위원회에서 ‘당직공직겸직금지’는 해제되었지만 이는 지난 3년의 실천적 경험과 댓가를 치룬뒤에 얻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사실,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현행제도하에서도 그 정치적 책임성을 명확히 한다면 이 금지자체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2008년 총선이후가 되면 최고위원회에 의원만이 아니라 의원경험을 가진 최고위원들의 배출이 가능할 것을 예상됨으로 구조상의 문제는 풀릴것으로 예견된다.

문제는 당직공직겸직금지의 해제로 의원단에 대한 당의 지도력, 의원단의 당노선,방침에 기초한 활동의 전개등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원내 전략수립과 의원단에 대한 당의 지도와 관련하여 종종 최고위원회의 지도력이 지적되기도 한다. '당 일상 사업과 정책의 의결,집행'을 최고위원회가 맡고있으며 당연히 당헌,당규상 책임 지도단위이다.

그러나 의원단의 정치적 책임성 또한 제기해야 한다.

이는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을 접하고 이해하는데서 가장 상징적인 집단이 바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즉 일단의 입법집단이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그책임성이 높다는데 있다. 즉, 당의 위기와 의원단의 책임성을 애기해야 하며 역설적으로 당 강화발전의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것도 의원단의 현실이다.

의원의 개별역량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단의 종합적, 기획적 정치역량강화를 지적하는것이다.

우선 의원단의 전체적 활동기획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국감전략, 정기국회전략등 문서상의 전략은 있었으며 삼성국감, x파일 관련 전략이 있었으나 다소 일회적 전술로 몇몇 의원의 개별플레이와 언론노출등으로 제한되는 것이 현재 원내전략기획의 현주소이다.

원내전략기획의 핵심은 당 중앙위원회의 노선과 방침, 최고위원회의 방침에 준거한 전략기획의 작성이어야 한다.

9개 의원실의 조합일 수 없고 소수 몇 개 의원실의 과두대표성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이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단간의 괴리를 낳는 요체이다.

의원단의 당 중심의 기획력을 확충하고 의원실의 기획역량이 모이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전체적 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최고위원회의 원내지도력 문제는 최고위원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정책위원회의 지도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정기획과 정책기획의 결합을 공고히 하고 여기에 당 기초실이 결합하여 일상적 전략기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기 보다는 당중심의 통합적 기획력을 내오기 위한 실력을 높이고 축적하는 노력이 백방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 기획 조정을 통합할 수 있는 ‘종합기획실’의 기능이 회의체가 아니라 부서로써 단일화 되었으면 한다.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의정지원단이 회의적 기능을 통해서 기획조정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보의 편차, 기획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편차, 각 단위한테 하중으로 다가오는 현실적 과제의 편차들이 있다. 편차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장 시의적절하게, 혹은 일종의 기밀까지도 유지해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정치기획의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시간이 자연스럽게 늦추어질 수밖에 없었고 시의성을 맞출 수 없었다.”(집권전략위원회 의정활동관련 인터뷰 중)

이와 연동하여 당 기조실에 의정기획이 부서로서 배속되어 당이 원내 의정활동에 대한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재검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민주노동당이 과도하게 원내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도하는 것은 원내의 특성과 원외의 특성 모두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과거 독일 녹색당의 경우 ‘근본주의적 야당주의’(녹색당 의원집단은 결코 의회화해서는 안되며 ‘근본주의적 야당’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에 기초해 원내에 대한 지도력을 강제하기 위해 녹색당 중앙 연방운영위원회가 의정활동에 대한 결의안 통과권을 가지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연방운영위원회가 가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결정권은 Fraktion(우리나라 원내 교섭단체에 해당) 내부의 결정권에 우선했던 것이 초기 정책이었다. 그러나, 녹색당 연방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모두 직업정치인들이 아니라 생활정치인들이었고, 이들은 매주 목-토요일에만 만나는 “주말”정치인들이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던 경험이 있다.

우선적으로 원내 의원단의 당에 의거성, 책임성을 높여 자체의 기획역량을 강화하는것, 당 최고위원회에서 실무적하중을 줄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전략,정치적 지도방침을 분명히 세워나가는것, 원내기획, 정책기획, 당기획의 통합적 전략기획력의 실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민주노동당 현재의 해법이 될것이다.

### 3. 나가며 - 금기에 도전하자!

다시 처음의 화두로 돌아가 보자.

‘다른종류의 정당’ - ‘진보적 의정활동’을 이뤄내기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소수정당의 한계를 얘기하기전에 2004년 원내진출시기에 가졌던 의원단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원가 시원하게 서민의 가슴을 열어주고, 가진자들을 향해 매섭게 질타하고 한 두개 법안이라도 정말 민중의 관심과 참여하에서 만들어 나가는 의정활동, 민중은 이러한 민주노동당을 기대하고 13%의 지지를 모아주었다.

금기에 도전하는것, 진보정당으로서 더욱이 소수정당으로서 가져할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덕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등원초기 노동자 평균임금인 180만원을 떼땄이 책정하였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거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든지, 게으른 보수정당 의원들과 다르게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진보정당, 모범의원이 중요하지만, 보수언론이 주는 또는 시민사회진영에서 주는 등수메달로 의정활동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보수정치와 언론의 프레임에 갇혀 자신을 평가하는 우를 범하게 될것이다.

삼성국감이 ‘국감’으로 끝나고 x파일 공방이 결국, 공방정도로 되는 일회성을 넘어서야 한다. 재벌에 대한 추상같은 칼은 지금 칼집에 잠자고 있지 않은가?

상호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평택기지 확장저지나 미군 범죄와 환경오염문제가 투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금기의 땅을 넘어서는 일에 당내 정파의 눈치보기로 역사적 소임을 뒤로 하지 않았는가?

부유세 8개법안이 잠을 자게된 현실을 단지 당지도부의 무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2005년 쌀개방 반대투쟁의 힘은 농민이며 민중자신이나 그 선두에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던졌던 의원의 그 투쟁의 진정성을 민중은 믿는다.

매해 전개되는 당 지도부 전국순회에서는 언론만을 쫓아 기자회견하고 지역위원회 잠깐의 간담회만 하고 등을 돌리지 않았는가? 시장한구석에 찾아가고 비정규 노동현장에서 같이 노동하는 그러한 진정성을 얼마나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는가?

가진자들의 금기에 도전하고 거대강국의 횡포에 도전하고 언론과 기성정치의 점수매기기 의정활동 평가에 도전하는것, 이것이 진보정당다운 의정활동이 아니가?

이 금기에 도전하는 것이야 말로 진보정당의 자긍심이여 속명이다.

-끝-

# 민주노동당이 걸어 온

- 최 규 엽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장

## 들어가는 말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 30일에 민주노동당은 정식 창당되었다. 창당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얼마나 같까’ 하면서 의아해 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5년여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티면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정세를 돌파하면서 우리 나라 제 3당이라는 확고한 위치를 확보했다.

냉정히 타산한다면 우리 당의 역사는 국민승리 21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1997년 9월 7일부터 시작된다. 2년 5개월 동안의 국민승리 21시대를 우리는 당 창건을 위한 준비기로 설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실제 국민승리 21은 형식적으로는 당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승리 21 주체들은 내용적으로 국민승리 21을 당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내외에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진보정당의 역사는 벌써 7년 5개월을 투쟁해온 것이다.

우리 당의 역사를 우리 당의 일정한 기구에서 정식으로 정리한 적이 아직 없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지역구 일정에 충충히 윤곽을 정리했을 뿐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개인의 견해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조만간에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우리 당의 역사가 정식으로 생산되길 기대한다.

### 1. 민주노동당 이전의 당 운동

- (1) 해방직후 당 운동 ,조선노동당-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 등
- (2) 조봉암선생의 진보당과 4.19 직후 사회대중당 민족통일당 등
- (3) 1987년 백기완 후보와 민중당 활동에 대하여
- (4) ‘비판적지지론’과 ‘독자후보론’
- (5) ‘양날개론’과 ‘시기상조론’
- (6) 당과 전선체와의 관계 : 당은 최고의 정치조직, 전선체는 최대 정치조직.

당은 대중투쟁, 의정활동, 선거활동 동시 진행  
전선체는 주로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전개.  
대중투쟁의 중심에 당이 있어야 한다.

### (7) 선거투쟁과 전민항쟁의 관계에 대하여

#### 0 합법적 선거활동으로 집권이 가능한가 ?

- 제도와 절차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대중투쟁 없이 법안 한 조항도 관철시킬 수 없다.

대중투쟁과 선거투쟁 의정활동은 통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대중투쟁에 선거투쟁 의정활동은 복속되어야 한다.

- 전민항쟁을 통해서도 집권이 가능하고 선거를 통해서도 집권이 가능하다.  
구성된 정세와 주체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이 가능한 정세에서 반동들의 파쇼적 준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인데 이는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집권 후 가능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이남사회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판단이 주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 2. 민주노동당 전사 - 당 건설 투쟁시기 -

### 1) 국민승리 21 건설

\*\*\* 국민승리 21 추진위원회 건설과 국민후보 추진을 위한 선언자 대회 (97년8월18일)

\*\*\* 국민승리 21 발족식 (97년 9월 7일 6,3빌딩 국제회의장)

▲ 전국연합 : 1997년 2월 22일 6기 대의원대회에서 “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전국연합은 민주노총 등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제 세력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후보’ 방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 6월 14일 임시대의원 대회 “ 우리후보는 국민후보를 지향한다. 공동의 선거기구를 제안하고 (가칭 민주개혁국민연합) 여기에 민주세력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후보를 추대한다.’

▲ 9월 4일 전국연합 중앙위원회에서 국민후보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의.

▲ 민주노총 : 1997년 3월 27일 2기 대의원대회에서 “ 민주노총은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이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9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98년 지자체 선거 대거진출- 98,99년 정당 건설 - 2천년 국회의원내 진출을 목표로하는 정치세력화 사업을 힘차게 전개해 나간다”

▲ 7월 24일 2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제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공동선거 대책기구 구성에 적극 나선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공동선거대책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의 인적 물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의 주요 정책과 선거전략은 공동선거대책기구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한다. 공동선거대책기구에서 후보를 결정할 때에는 그 이전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결정한다.”

▲ 9월 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 권영길 위원장을 97년 대선에서 국민후보로 추

## 대하기로 결의

▲ 진보정치연합 : 7월 6일 2기 대의원대회에서 “ ... 폭넓은 민주 진보세력과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국민후보 운동을 전개한다. 국민후보는 .... 양심적인 다수 국민의 희망을 대변해야 하며 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지지를 기초로 진보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 ‘

\*\*\* 1997년 9월 1일 국민승리 21 추진위원회에서는 기 결성된 국민후보 추진위원회 (위원장 : 고영구)에 권영길을 97년 대선 국민후보로 추대하기로 함“

\*\*\* 국민후보 추천위원회 : 위원장 고영구 위원 전국연합 19명, 민주노총 16명, 진보연합 5명 시민사회단체 10명

\*\*\* 장기표, 김용태, 김진균, 고영구, 오세철, 김세균, 박석운 등 참여. 소위 운동권에서 지금의 사회당 등이 전혀 참가 안 했고, 전국연합의 결정에 반대했던 한총련 전농 불참.

\*\*\* 1997년 7월 25일 사무실 입주와 1인당 1백만원 ??

### 2) 1997년 12월 대통령선거

- 조직기구 : 국민승리 21 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등 )

- 공동대표 권영길 이창복 운영위원장 이창복 운영위원 양경규 양재덕, 조직팀장 최규엽, 정책팀장, 노회찬.기획팀장, 한충목, 총무팀장 유기홍 대변인, 임종철, 홍보팀장

- 대선결과에 상관없이 진보정당 건설로 매진하겠다.

- 2백여명의 교수 전문가 3개월여의 토론 끝에 공약 발표

- 회원 5천명 가입목표로 조직사업 전개

- 언론의 철저한 외면.....

- 일어나라 코리아 파동 , 국민후보 진보후보 민주개혁 등등 일반 민주주의 과제와 진보적과제 혼란

- 중간 이탈자 속출....

\*\* 기탁금 5억이 없네....??

\*\* 민주노총 이회창 김대중 권영길 ( 10만여표 ? )

\*\* 실제 득표 ; 30만60026표(1.2%)

외부 ; 지역정치의 벽에 한계, 금권정치, 조직력에 한계, 반공반북이데올로기

우리내부 ; 준비부족 정체성의 혼란

### 3. 국민승리 21 - 진보정당 창당 준비 매진, 대선투쟁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 상근자 150여명에서 13명으로, 대표 권영길 집행위원장 최규엽 등

- 전국연합 다시 DJ로, 민주노총은 밀물처럼 철수 -이상현 이근원 최철호 최기영 사수
- 대선평가는 적당히 봉합 그래도 하기는 했다.
  - = 백기완 선본이 왜 평가도 못하고 해산되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
- 1998년 6월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 기초의원 40명출마(18명당선), 광역의원 6명출마(2명당선), 기초단체장 3명출마 모두 당선
- 독자적 활동영역으로 구제금융이후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실업운동 설정
  - 국민승리 21이 실업운동 주도하기 시작.
  - 대중정치투쟁의 선례를 남김, 서울역 노숙자 투쟁 등
  - 1998년 8월 전국실업자동맹 결성
- CMS회원 관리 시작 당비 수납에 결정적인 기여
- 권영길 대표 정력적인 조직활동
-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1차, 2차 원탁회의 - 원로들과 각계 대표로 지도부 구성
  - 2차 원탁회의를 계기로 진보정당추진이 대세를 장악하기 시작
  - 민주노총 적극적 가담 시작.
- 1999년 봄 마포구민회관에서 ‘진보정당 창당추진위원회’ 결성
  - 공동대표, 권영길 이갑용 양연수 집행위원장 천영세
- 1999년 8월 여의도 국제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창당 준비위원회 결성
  - 발기인 1700여명이 참석 당명 결정 투표결과 - 통일민주진보당과 막판 경합 수십표 차이로 민주노동당 합격. 창당준비위원장 권영길, 강령준비위원장 안병욱 교수 당명준비위원장 조영건교수
- \*\* 당시 지도부의 생각 그리고 실수 ??
- \*\* 입장이 달라도 다수결에 복종하고 단결을 유지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진보적 정치조직,

#### 4. 민주노동당 창당 - 총선의 시련 그러나 곳곳이 전진 -

##### 1) 2000년 창당

- 2천년 1월 30일 전국 40여개 지부와 1만 3천명의 당원으로 창당.
- 4.13 총선투쟁 돌입
  - 전국 227개 선거구에서 21개 선거구에 출마 평균 13.1% 득표율 기록
  - 울산북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5백 여 표 차이로 낙마,
  - 1992년 민중당 후보의 2배 득표율로 진보정당 가능성 확인.
  - 창원등 노동자 밀집지역 가능성 확인. 40% 달성..
  - 정당명부 거의 확실시 되었으나 국회에서 실패,
  - 울산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 추궁- 책임주의가 관철되는 정당상 정립
- 많은 사람들이 2천년 총선후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입에 실패하면 해산 될 걸로 예상

했으나 민주노동당은 이미 총선방침에 주요하게 민주노동당 사수를 못 박았고, 해산도 아니고 등록취소를 당했으나 바로 민주노동당으로 재등록.

\*\* 민주노동당이 굳건하게 버티는 걸보고 당원 가입 대폭 증가 .

\*\*\* 민중당의 최대 오류는 당 해산이었다는 것이 입증됨.

- 2월 14일 '1인 1표 현행전국구제' ' 2천만원 기탁금제 ' 위헌 신청

- 노동시간 단축 캠페인

- 6월 부패방지법 제정 1백만인 서명운동

- 6월 27 일 상가임대차보호법입법청원운동돌입

민생정당 정책정당 면모과시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정당에서 대중정치투쟁으로 입법 가능성 현실화

- 7월 말 자통위 주관으로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 시작 당 독자집회로 7백여명 집결  
용산미군기지방환운동본부결성에 주도적인 역할,

\*\* 상가임대차 운동이나 용산 미군기지 운동을 볼 때 보수정당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입증. 중앙당 시스템 운영 활동방식이 보수정당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 2) 2001년

- 2월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 대우차 김우중회장소환을 위한 결사대 파견

- 5월 19일 중앙연수원 개원

- 5월 22일 민주노동당과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10만 키로 대장정시작

- 6월 15일 금강산 대토론회 참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통과

- 사회당과 통합논의

- 12월 29일 용산미군기지 집회 18차 최초 대규모 집회 성사

= 미군 당국 이전의사 표명시작

\*\*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사회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무진 애를 쓴 한해

## 3) 2002년 - 드디어 제 3 당으로 부상-

- 2월 부시방한규탄 국민대회 개최

- 6월 제 3회 지방선거 218명출마 ,

=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9+ 2 , 기초의원 32명 당선

\*\*\* 정당득표율 8.13로 제 3당 도약

- 12월, 지방선거 성과를 토대로 대선투쟁 제 3당으로서 위치 확고히 정립  
진보정당의 필요성 가능성 충분히 선전  
부유세 미군단계적 철폐 등 이슈파이팅

4) 2003년 - 노동자, 농민 연대 완성! -

- ‘1인 1표 전국구제’ ‘ 2천만원 기탁금제 ’ 위헌 판결  
= 1인2표정당명부제, 1천5백만원 기탁금으로 개정
- 11월 전농 정치세력화 결정으로 노동자, 농민연대가 완성됨.

5) 2004년

- 총선에서 지역구 2명 당선 당 지지율 13.5% 쟁취, 명실공한 제 3당으로 부상-
- 지역구에 125명 출마 당원 6천여명이 헌신적으로 전국에서 총선투쟁 진행  
125명의 출마자와 함께 6천여명의 민주노동당의 기간핵심 당원 형성
- 기자들은 민주노동당으로 몰려가라..플래시의 표적이 된 10여명의 의원들
- 어라 우리와 똑같은 서민들이네 민주노동당은 확실히 서민들이 만든 서민을 위한 정당이구만.....
- 당직과 공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당헌 당규 통과, 의회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당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집단지도체제 확립 의결과 집행을 통일시킴
- 6월 6일 최고위원체제 출범
- 이라크 파병저지 단식농성투쟁 전개
- 12월 5일 7천명 당원이 모인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반대 쌀 수입개방 반대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총진군대회 개최
- 민주노동당 침탈 저지투쟁 권영길 의원 7일 간 단식농성과 결합된 총진군대회로 국무총리 사과 등 요구 달성.
-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철폐투쟁 전개 개악안 보류시킴.
- 국가보안법 폐지 1천여명의 목숨 건 단식농성 투쟁 전개
- 당 지지율 15-20% 대 꾸준히 유지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이 만든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자각,  
고정지지층이 탄탄히 형성되어 있음.  
24-35세 사무직 생산직 노동자 지식인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농민들 지지율은 5% 전후로 대단히 낮은 상태임

5. 과제

- 한미FTA저지 투쟁과 비정규직 투쟁에 올인해서 대선을 돌파하자.

- 출세주의 의회중심주의 정파분열주의를 극복하자
- 울산의 실패가 당 발전에 중대한 장애 조성, 올바른 평가를 통한 대안모색 절실.
- ‘거대한 소수 전략’의 혼란으로 의원활동의 정형마련 실패.  
대중투쟁 우위의 의정활동인가 ? 의정활동우위의 대중투쟁인가 ?
- 당내 리더쉽 부재  
의원단의 정책 입법활동에서 소외되어 있음. 의원단과의 올바른 관계정립  
정치적 지도부로서 역할 안정화
- 당원을 당 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문제, 냉담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민주노총과의 올바른 관계설정
- 사회운동의 저수지인 학생운동의 위기 극복문제
- 이벤트형 사업에서 거대 담론을 목표로 중장기적 대중정치투쟁 전개로 정세 돌파
  
- 정파활동의 부작용 극복 문제  
당의 통일 단결 저해  
지도부 부정  
당 보다는 정파챙기기 ;

## 6. 당과 대중조직

- 당은 정치적 요구로 결사한 조직으로서 주요임무가 정치투쟁이요 부차적으로 대중조직의 생존권투쟁 지지지원
- 대중조직은 대중들의 경제적 이해와 요구로 결사한 조직으로서 주로 당사자들의 이해 관철을 위한 경제투쟁을 실천한다.
- 당과 대중조직은 조합주의적 정치투쟁의 공간에서 만난다.
- 당은 대중조직의 단결을 높이고 대중단체의 투쟁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 당의 대중조직에 대한 지도는 내용을 통해서 관철되는 것이지 형식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 최고의 정치조직은 당이요 최대의 정치조직은 전선체이다.
- 당의 강령과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 당 중심 활동의 첫째 요소이고 둘째는 당 조직활동에 열심히 결합하는 것이다.
- 분회모임 당원모임 당의 정치 실천활동 기타 당 활동에 주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끝-

# 2007년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

- 최 규 엽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장

## <대선평가>

1. 민주노동당의 권영길후보는 당 단합과 진보대연합, 기층조직강화와 민중총궐기 성사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보다 낮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진보운동단체들에서는 한미FTA협정과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는 유일한 진보후보인 권영길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전국을 순회하며 호소하였습니다. 지난 대선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과는 무엇이고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진보운동대오가 혁신(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선거 시기 결정적인 득표요인은 수년간 활동해오며 인민들에게 검증 받은 주체- 당과 후보 등- 의 실력과 이미지 등이다. 이 번 대선에서 보여 준 이명박 당선자의 압도적인 지지율도 허위의식이란 어쨌든 인민들이 수년간 활동해온 이명박 당선자의 정치적 실천과 삶에 대해서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인민들은 이명박 당선자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말 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러한 요인들을 근거로 해서 그를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더 후퇴시키진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도 또한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민족민주 진영은 가장 도덕적이고 헌신적이며 서민적인 집단으로서 대한민국 유일의 진보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서민들로부터 '민주노동당표' 진보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지난 2002년 선거구도와 객관적 정세는 민주노동당에 아주 유리했다. 후보가 셋밖에 되지 않았고, 호순미선 촛불투쟁이라는 대중운동이 대선 정세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천문학적 부정비리로 보수정당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을 때이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번 대선을 분석해보면 71만 표가 대단한 참패라고 보는 것은 다분히 정서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후보가 다자구도 이었고 대다수 서민들이 허위의식 속에서 '1)노무현 좌파? 정권'을 심판한다 하면서 민주노동당도 같이 심판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오류와 잘못을 범해서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실망을 준 결과로 얻은 참패나, 심판의 의미가 아니다. 물론 후보 문제는 더욱더 아니다. 2004년 이후 민주노동당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패배이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특별히 잘못된 일이 있었는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을 뿐이다.

2004년 이후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을 인민들은 '민주노동당 의원활동'을 통해서 평가하고 분석한다. 의정활동 전략으로 '거대한 소수전략'을 정립했으나 실패했다. 국회 울타리 안에서 보수 정당들과 차별성도 없고 현실성도 부족한 '입법발의'를 부지런히 해서 시민단체들로부터는 우수 의원들로 평가 받았고 개별적으로 스타의원도 탄생되었으나 인민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실패했고, 뚜렷한 생활상의 고통을 줄이거나 향상 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었다.

통과되기도 힘들고 보수정당과 크게 차별성도 없는 법안을 개별적으로 경쟁적으로 입법발의 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거대담론이나 차별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9-10명의 의원들이 2)합심협력 해서 국민적 쟁점을 형성하는데 노력했어야 했다.

둘째로는 이해집단이나 대중조직들에게 대중투쟁을 맡겨버리고 국회 울타리 안에서 소극적인 저항만을 일삼을게 아니라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대중운동의 조직자 교육자 선전자 역할을 했어야 했다. 이번 대선시기 '만안보' 하듯이 말이다.

- 1)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었나? 아니다. 미국의 신제국주의에 굴복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린 외래 투기자본과 재벌들을 위한 특히 삼성재벌을 위한 보수정권이였다.
- 2) 인민들이 볼 때 최고위원들보다 인지도나 지도력이 앞선다고 보는 인물들이 의원들이었고 또한 의원들이 아니고는 언론이나 인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힘든 조건에서 의원들의 활동은 민주노동당에 결정적이었으나 합심협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과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지 못했다.

사실 대선 패배의 실질적인 큰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견해이고 과학적인 분석이다. 최고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의원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중고등학교 실력고사 보듯이 닥쳐서 날을 밝혀 머리싸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수능 보듯이 수년간 땀 흘려 노력해온 결과를 심판받는 것이다. 특히 대선은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운동시의 전략전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경우도 있다. 이 번 대선에서 일관된 차별성 있는 선거운동 전략이 부재했고, 평등계열 동지들의 강력한 반대로 3)한나라당 전선을 위한 통일전선전술에 실패했으며, 만인보 등 열심히 노력했으나 기회주의적 투쟁노선으로 민중대회를 통한 소기의 성과를 얻는데 또한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문국현후보 대응전술이 부재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무사안일과 오만함이 선거운동내에서 분명히 존재했다.

적어도 150여 만 표는 나오지 않겠냐는 근거 없는 무사안일과 오만함이 선거운동 진영내에 팽배해 있었고 특히 대선후보 경선시 권후보를 지지 않았던 동지들 경우에는 상당수의 활동가들이 선거운동을 해태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후보의 경우 선분을 시의적절하게 일관된 노선으로 일사불란하게 구성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만인보이후 지그재그 노선으로 선거운동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지 못했다.

당내자주계열 동지들은 다수파로서 대선 패배이후 즉각적으로 4 년간의 당 활동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최고위원들 총사퇴를 결의했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심상정의원을 추천했다.

자민통동지들은 당내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결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노선에서 좌우편향을 보였고 자리다툼에서 패권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민통 대오의 혁신과 반성 없이 우리 운동은 일보도 전진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민족민주진영의 어려움은 결의각오가 부족한, 책임성 부족한 지도부의 사업 작풍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사료된다. 지난 11월 11일 민중대회를 보라. 대중성을 얻는데도 전투성을 발휘하는데도 모두 실패 했다. 수 많은 군중들을 반드시 서울에 집결해 내야 했으며 지도부는 감옥갈 각오로 투쟁을 독려함으로써 민족민주 진영의 실력과 진정성을 대중들에게 보여줬어야 했다. 운동진영 전체의 합법주의적 편향에서 나오는 지도부의 뼈를 깎는 몸을 내던지는 희생정신 부족과 활동가들의 기회주의적 태도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였다.

인민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요구와 연관되지 않은 정치투쟁은 없다. 자주평화통일운동과 인민들의 생활상의 문제와 연관시켜 선전선동하고 투쟁할 줄 알아야 한다. 정책전문성과 창조적인 기획력을 갖추는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실천한다는 동지들이 실은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태세다. 지역썩클주의를 극복하고 뼈를 깎는 반성으로 스스로를 혁신하고 온몸을 던지는 치열한 희생정신과 전투성을 회복할 때이다.

#### <'중북주의', '친북당'에 대한 견해>

2. 심상정비대위원장은 "일심회사건 등 중북주의사례에 대해 명확하게 평가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하는데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중북주의청산'을 강경하게 밀어부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기자회견에서는 '친북당'의 이미지를 벗고 '중북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내 일부에서 주장하는 '중북주의', '친북당' 청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평등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한 심상정 의원의 북에 대한 인식정도나 통일문제에 대한 고민 정도는 안타깝게도 다른 평등계열 동지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등계열 동지들의 북에 대한 인식정도는 독재정권의 반공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수준도 대단히 일천한 것 같다.

---

3) 삼성특검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조차도 후보단일화 구도에 갇힌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수년간 당 사업을 같이 해온 자주계열동지들이 이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업도 사상사업도 제대로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쟁책과 분단고정화 전략을 저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연북친북용공의 김구선 생노선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경직된 이해와 미제에 대한 불철저한 태도로 인해서 연북친북을 중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민통 진영일부의 신중하지 못한 처사와 기계론적 통일운동의 오류도 한몫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평등계열동지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하면 백이면 백 친북중북 문제가 이번 대선패배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분당을 막는다는 이유로 분당론자들의 음모적인 억지주장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민통 진영을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고 자신들의 세력확장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도 공격하지 않는 언술을 가지고 공안적인 공격을 한술밥을 먹어왔던 동지들에게 무분별하게 근거없이 해대는 것은 이미 진보운동을 포기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 <'민주노총당'에 대한 견해>

3. 심상정비대위원장은 취임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이라는 낯은 이미지를 벗겠다면서 "그동안에 노동정책사업, 당직에 대한 노동부문 할당제 등 기존 당의 노동전략과 관련해서 전면적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전농, 전빈련 등도 민주노동당의 배타적 지지단체입니다. 민주노동당과 대중단체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과 대중조직은 분명히 다른 조직입니다. 지금 당은 민주노총과 구별 정립되는 정책과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과의 연대사업도 힘있게 하나가 되어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수에게 당은 외면 받고 있는데다가 초기에 당을 주동적으로 건설했던 대기업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뜨거운 지지를 잃어가고있는 상태입니다. 당은 대기업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조합원 수준에서는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당 가입율은 아직도 5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당의활동이 조합원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입니다. 그동안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천사업들의 오류와 한계를 당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평가하고 반성하며 대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은 민주노동당과 공동운명체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대중조직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하여 이들과 거리를 둬으로써 당의 활로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당의 정치적 지도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이들과 올바르게 결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때라고 봅니다.

다만 민주노동당이 계급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극복해야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노동자가 중심에 서고 노동자가 주도하는 통일전선적 당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배타적 지지 단체들과 운명을 같이 하되 민주노총당도 전농당도 전빈련당도 되어서는 안되고 중간자영업층 ,지식인, 중소상공업자 등도 포괄하는 모든 계급계층을 망라한 계급연합당,통일전선적 당으로 새롭게 재창당 되어야합니다.

#### <신당창당에 대한 견해>

4. 신당창당을 위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오는 2월 임시당대회까지 민주노동당을 해산하고 제2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회 대의원들이 발기인이 되어 새로운 진보정당, 제2의 진보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신당창당은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을 분열시키고, 변혁과 역사를 후퇴시킨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민주노동당 해산과 제2창당(신당창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노동당 내 신당창당론자들은 기본적으로 패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내 다수파지위를 장악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확대해석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민통 진영의 책임도 일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브라질노동자당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신제국주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각이한 사상과 노선을 가진 정치세력이 함께 진보정당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

이기도 합니다.

사민주의를 하기 위해서 분당한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힘든 부정직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의 현재의 정책은 사민주의적 정책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변혁적 지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노동당 분당은 우리나라 진보운동을 수 십년 후퇴시키는 반동적이고 종파적인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적 - 공안적 언행으로 자민통 진영을 고립 압살 시키기 위한 퇴행적 행위에 불과 할 뿐입니다.

지금은 분당할 때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민주노동당을 계급정당에서 통일전선적 당으로, 월수입 3백만원 이상 노동자들이 지지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의사 서민정당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진짜 서민정당으로, 출세주의적 합법정당 편향에서 전투적이고 헌신적인 대중정당으로, 관념적인 구호정당에서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 <비대위 인사구성과 운영에 대한 견해>

5. 민주노동당 비대위 체계를 두고 일부에서는 비대위 인사구성을 놓고 범평등계열과 심상정비대위원장 측근들이 대거 배치되고, 신당(분당)을 추진했거나 심지어 사회당적을 가진 사람까지 비대위에 참여하게 된 것에 비판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민주노총, 전농 등 대중운동단체의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비대위가 어떤 인사들로 구성돼야 하며 핵심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원 인사권을 부여한 상태에서 비대위원 인사문제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합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비대위가 돌파해야 할 과업은 4,9 총선승리와 2월에 강행될 한미무역협정을 저지하는 일입니다. '총선- 한미무역협정 저지 비대위' 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업의 힘 있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노농빈을 비대위원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민주통합신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노무현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힘을 합쳐 한미무역협정을 다가오는 2월에 강행시키려고 획책하는 위기적 정세입니다. 지금 심비대위원장은 중복주의, 분당론에 타협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 확고히 선을 긋고 대선이후 잘못된 논쟁으로 실추된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당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세야 말로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거대한 소수 전략을 치열하게 멋있게 실현해 낼 때입니다. 지금 9명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한미무역협정을 저지해 내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 한미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조직사업 교육사업 투쟁사업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국면을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중대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입니다. 물론 비대위원들을 비롯한 당지도부도 이신작척 하면서 올바른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인민들은 민주노동당이 한미무역협정을 막기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투쟁하는 가를 지켜 볼 것입니다. 보수 정치인들처럼 적당히 쇼를 하는 것인지 온 몸을 바쳐 나라사랑 인민사랑 정신으로 싸워나가는 지를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비대위의 임무는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 단합과 혁신을 위한 견해>

6. 2007년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를 중심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뤄 선전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선이후 혁신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혁신과 발전은 민주노동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진보운동진영의 문제이자 운명이라고 할때, 현시기 민주노동당이 당내 분쟁을 수습하고 단합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면하고도 절박하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온 정성을 다해서 분당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혁신과제들은 앞에서 대강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언급은 다음 기회로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끝>